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
팔레스타인

부시의 끝없는
전쟁과 학살

3.16

국제공동반전행동에
함께 하자

일시: 3월 16일(일) 오후 2시
장소: 서울역광장 / 주최: 파병반대국민행동
부산 집회는 3월 15일 오후 4시 서면 태화백화점 앞에서 열립니다

지난주 미국 경비견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 1백여 명을 학살했다



국제 여성의 날
1백주년
- 아직 오지 않은
해방을 향해

6~7면

이명박과
‘재벌천국 서민지옥’ 시대

3면

우석균 칼럼

- 이명박과 의료 시장화 정책

9면



3·16
국제공동
반전행동

- 김환영 파병반대국민행동
운영위원 인터뷰

“반전 운동이

이명박 굴복시켜야”

12면

- 반전 음악과 책들

- 이스라엘의 홀로코스트

4면

5면

국제

- 코소보와 발칸의 진정한 대안

5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전진하고 있는 유럽 급진 좌파

7면

www.counterfire.or.kr

〈맞불〉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맞불〉 온라인 기사

세계경제 위기는 왜 왔나

크리스 하먼이 최근 신용 경색의
기원과 영향을 살펴보고, 왜
경제 위기가 자본주의에 고유한
특징인지 설명한다

총선 이후의 파키스탄

이명박 시대와
국가보안법에 맞선 투쟁

.....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인용해도 될까요?”

“노무현 정부에서 땅값이 올라 세금만 늘었다. 아파트 가격이 3배 정도 뛰[어서] … 중부세만 났다.”
- 기획재정부 장관 강만수

“40억 중 28억은 집값 상승 요인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나오는 관계없는 무관한 요인에 의해 늘어난 재산”
- 노동부 장관 이영희

“매번 애국가를 제창하면서 하느님이 보우한다는 믿음을 얼마나 가졌던가 생각해 볼 일 … 신의 가호가 함께할 것이라는 신앙심을 갖고 있을 때 사회복지 정책은 성공할 것”
- 보건복지부 장관 김성이의 복지관

“거짓말은 모두 나쁜 게 아니다. … 이명박 정부의 국무위원 후보자들이 너무 정직해서 사태를 악화시키는 듯하다.”
“공직자를 뽑을 때 이제는 어느 정도 타협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 성직자를 공직에 보내는 게 아니다.”
- <중앙일보>의 충고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 내각 인사를 ‘BEST OF BEST’라고 했지만 국민들은 ‘WORST OF WORST’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다.”
- 한나라당 김용갑

“라면 값이 1백 원 올랐는데 … 하루 10봉을 먹으면 1천 원, 한 달이면 몇만 원이 돼 큰 타격을 준다.”
- 이명박의 발견

“5공화국은 … 역대 정권 중 처음으로 평화적 정권 이양을 통해 민주주의가 자랄 토양을 마련했다.”
- 전두환

“나이트 어르신들이 저에게 빨갱이라는 소리를 갑자기 하고 있다. … 주변에서는 차라리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다른 당으로 출마하라는 제안을 많이 한다.”
- 강기갑 의원이 전하는 ‘총복주의’ 파동의 결과

전 세계로 번지는 물가 인상 반대 투쟁

김용욱

국제 곡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최근에는 밀 값이 하루 만에 25퍼센트 오르기도 했다. 이미 매일 전 세계적으로 2만 5천 명이 식량을 살 돈이 없어서 굶어 죽고 있다. 이런 마당에 물가 인상으로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게 될까? 한 연구기관은 곡물 가격이 1퍼센트 오를 때마다 추가로 1천6백만 명이 식량 불안정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곡물 가격 급등 원인으로 작황 불안정이나 제3세계 곡물 소비 증가를 꼽는다. 또 어떤 이들은 농업 국가들의 ‘식량 민족주의’를 원인으로 지목한다.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자본주의 이윤 논리 때문이다.

최근 <파이낸셜 타임스>도 지적했다이 “전 세계적으로 모두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충분한 양의 식량이 존재한다.” 문제는 식량이 사람의 생존이 아니라 이윤을 위해 사용된다는 데 있다.

일부 정부와 기업 들이 바이오연료 생산을 ‘황금알을 낳는 사업’으로 여기면서 엄청난 양의 곡물이 낭비되고 있다. 예컨대 현재 미국에서 생산되는 옥수수 중 33퍼센트가 바이오연료 생산에 사용된다. 또, 투기자

금이 곡물 투기로 몰리고, 거대 곡물 기업들이 이에 편승해 곡물 재고를 매점하면서 가격을 더욱 치솟게 만들고 있다.

이런 이윤 논리에 도전하는 투쟁들이 최근 전 세계적으로 들불처럼 확산되고 있다.

투기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등 중동의 친미 독재 국가에서는 물가 인상으로 당장 끼니를 굶어야 하는 사람들이 대규모 거리 시위에 나서면서 정부들이 패닉 상태에 빠졌다. 아프리카 모로코, 부르키나파소, 카메룬 등에서도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고, 그 중 부르키나파소와 카메룬에서는 반정부 시위로 발전했다.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쌀과 콩 같은 주식의 가격이크게 오르면서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대규모 노동자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선진국에서도 곡물 가격 폭등이 정치적 쟁점이 됐다. 예컨대 프랑스에서 곡물 가격 급등의 여파로 식료품 가격이 오르면서 저소득층 가구 지출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크게 늘었다. 이 때문에 서민의 ‘구매력’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큰소리친 우익 대통령 사르코지의

지지율이 33퍼센트로 추락했고,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노동자 투쟁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

한국에서도 밀가루 가격 인상으로 라면이 사재기 대상이 되고 자장면 값이 경충 뛰었다. 콩 가격 인상으로 두부 값도 크게 올랐다.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말까지 나온다.

이명박 정부가 ‘물가와와 전쟁’을 선포했다지만 친기업을 표방하는 이 정부는 기업들의 이윤은 건드리지 않고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만 억누르려 할 것이 뻔하다.

이를 좌절시키고 우리의 생활 수준을 지키려면 다른 나라 노동자들처럼 싸워야 한다.

지난 1월 31일 멕시코에서 일어난 물가인상 항의 시위

김광일 반전 활동가 탄압을 중단하라!

2월 28일 경찰은 ‘파병반대국민행동’ 기획단의 김광일 씨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고 통보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초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인 피랍 사건이 벌어진 직후 열린 파병반대국민행동의 촛불집회를 문제 삼아 김광

일 씨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이경아 씨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 두 활동가 모두 정부의 탄압에 맞서 지금까지 출석을 거부해 왔다.

그동안 반전 운동은 부시의 전쟁과 학살 점령을 지원하는 한국 정부의 파병에 반대해 왔다. 반전

운동이 예견했던 모든 비극이 현실이 됐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이라크 전쟁 개전 5년을 맞아 세계적 반전 시위를 건설하고 있다.

현재 경찰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김광일 씨는 “‘3.16 국제공동 반전행동’을 앞두고 ‘파병반대국민행동’ 활동가를 탄압하는 것은

반전 운동에 대한 탄압”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이명박 정부가 집회 자유 침해처럼 민주주의를 공격하는 조치들을 내놓고 있는데 정치적·시민적 권리를 탄압하는 정부에 맞서 싸워야 한다”하고 호소했다.

김덕엽

미국 광우병 소 도축 현장이 폭로되다

우리가 왜 이 소를 먹어야 하는가?

미국의 시민단체인 ‘휴메인 소 사이어티’는 도축장에서 제대로 견지 못하는 병든 ‘다우너’ 소에게 소방 호수로 물대포를 쏘고 전기 충격을 가하고 지게차로 들어 올려서 불법적으로 도축하는 충격적 영상을 폭로했다.

이 끔찍한 영상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불러 일으켰다. 왜냐하면 제대로 견지 못하는 것은 광우병의 전형적인 증상이기

때문이다.

결국 지난달 17일 미국 농무부는 6만 5천 톤에 달하는 사상 최대의 쇠고기 리콜을 명령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미 3분의 1이 학교 급식용으로 전달됐고 이 가운데 최소한 9천 톤이 소비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 농림부는 해당 도축장이 한국 수출 승인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한국으로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왜냐하면 이번 사태가 벌어진 곳은 미국의 다른 도축장과 과 별로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2006년 미국 농무부 감사보고서는 도축장의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제거 관리가 부적절하며, 오로지 육안 검사만 하고, 육안검사도 5~10퍼센트 정도만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있다.

육가공 공장도 마찬가지다. 미국 최대 식육회사 타이슨 푸드

노조위원장의 증언처럼 “생산라인은 회사의 이익 추구 때문에 노동이나 식품 안전 등을 고려할 수 없는 속도로 빠르게 설정”돼 있고 “많은 노동자들이 이러한 가혹한 노동 조건 때문에 평소에 직장을 자주 바꿔 작업에 익숙하지 않”아서 “SRM의 적절한 제거는 애초부터 불가능하다”.

그러나 사상 초유의 리콜 사태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쇠고기 수입 확대 압력은 계속되고 있다. 주한미국대사 버시바우는 “빠있

는 쇠고기도 안전”하다며 “애초에 빠있는 쇠고기도 수입 대상이었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뻔뻔스럽게 말했다.

이명박 정부는 여기에 장단을 맞추듯 3월 중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고 개방을 확대하려 한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를 보면 도시민의 75퍼센트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대다수 국민들의 뜻을 거슬러 ‘광우병 프렌들리’한 정책을 추진한다면 이명박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와 함께 ‘리콜’당할 것이다.

박건희

까도 까도 추문이 끝없는 이명박 ‘양파 내각’

강동훈

이명박의 ‘강부자 내각’이 제대로 출범 하기도 전에 장관 3명이 낙마했다. 그러나 나머지 다른 장관들도 문제가 심각하다. 까도 까도 의혹이 끊이지 않는 ‘양파 내각’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복지부장관으로 내정된 김성이는 “이미 낙마한 3명보다 더 심각”하고, 청와대 수석인 박미석은 표절 논문으로 BK21 지원금을 받은 것이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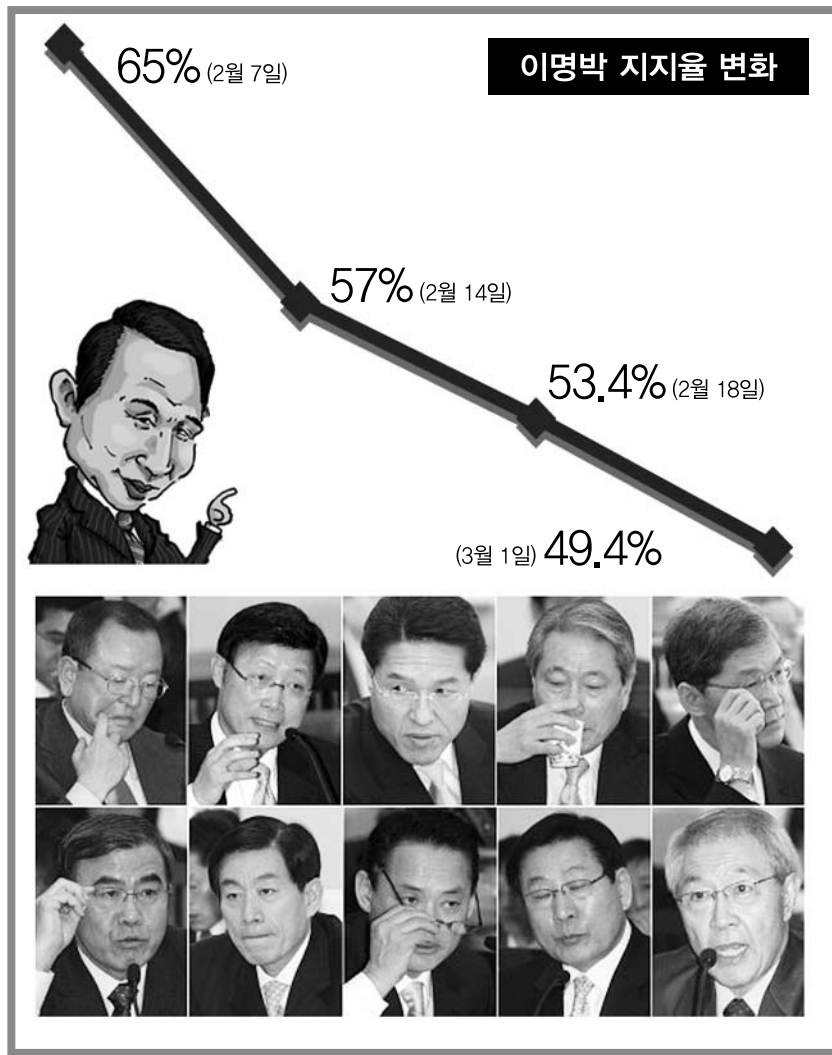
이 외에도 사퇴해 마땅한 강부자 내각의 면면은 열거하기 힘들 지경이다. 투기 논란이 일자 인사청문회 당일에 트랙터와 굴삭기 등으로 발갈이를 한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기준시가 7억 2천만 원 짜리 골프회원권 4개를 갖고 있고 1978년생 아들 재산이 7억 원이 넘는 법무부장관 김경한. 1억~2억 원 짜리 골프회원권을 “싸구려”라고 한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 35만 원 짜리 비눗갑과 3천만 원 짜리 불박이장으로 치장한 화장실이 있는 최고급 오피스텔을 소유한 노동부장관 이영희. 일본 국제 투기로 돈을 번 문화부장관 유인촌 등.

이번 파동은 부정부패·투기가 한국 지배자들의 DNA라는 점과 함께 이들의 역겨운 이중성도 그대로 보여 줬다.

결국으로는 ‘애국심’ 운운하지만 장관의 상당수가 병역 면제고, 그 자식들의 상당수는 한국 국적이 아니었다. 그러나 조중동은 오물투성이 대통령 이명박의 ‘비리·부자 코드’를 옹호하기에 바쁘다.

이명박 ‘역주행’의 성격도 분명해지고 있다. 복지부장관 내정자 김성이는 한국에 “복지병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경총 자문위원 전력이 있는 노동부장관 이영희는 “불법 노동운동은 끝까지 책임 물을 것”이라고 공공연히 천명했다.

인수위 시절의 ‘삽질’에다가 강부자 내



각에 대한 분노 때문에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은 임기말도 아닌데 벌써 49퍼센트까지 떨어졌다. 심지어 저 지긋지긋하고 꼴도 보기 싫은 노무현이 반사이익으로 주목받는 기막힌 일도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인수위 시절에 이미 언론 사찰을 시도했던 이명박은 언론 통제를 강화하려 한다. 방송통신위원장에 이명박의 정치적 스승이자 이명박 정부의 실세 중 실세라는 최시중을 앉히려 한다. 방송을 장악해 ‘형님 뉴스’를 만들고 여론을 왜곡하려는 것이다.

언론에 외압을 넣는 것도 서슴지 않고 있다. <국민일보>가 청와대 수석 박미석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자, 이명박 정부는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후속 기사를 보도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일보> 사장 조민제는 “‘<국민일보>가 우리랑 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 그런 것 같지 않다’며 항의전화가 많이 온다”고 말해 외압이 있었음을 사실상 시인했다.

운동에 대한 탄압도 강화하려 한다. 이명박이 “경찰이 때맞는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고 하자 경찰청장 어청수는 ‘불법’

시위 가담자 등에 대해 훈방하지 않고 모두 즉결심판에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독재정권 시절에 시위 참가를 막으려고 썼던 방법을 다시 부활시켰다는 것이다.

역주행

세계적인 석유·곡물 등의 가격 인상으로 서민 물가가 급등하면서 이명박 정부도 ‘서민 물가 안정’을 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의 부동산 투기 조장, 등록금 인상 조장, 사유화와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 조장, 임금 인상 억제 등 ‘서민지옥’ 정책들은 물가 인상을 더욱 부추기고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것이다.

이에 대한 대중의 불만이 커질수록 탄압을 강화하고 언론을 통제하려 하겠지만 이는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이 될 것이다.

한국노총 지도부는 이런 이명박의 역주행에 편승해 한나라당을 ‘배타적 지지’하며, 국회의원 자리에만 골몰하는 한심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

노무현의 노동법 개악을 야합해 주었던 한국노총 전 위원장 이용득은 “상황이 바뀌었다”며 한나라당 비례후보로 들어가려 하고, 한국노총 출신 8명도 한나라당 1차 공천심사를 통과했다.

또, 한국노총 장석춘 신임 위원장은 “기업 성장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대기업 사업장에서 임금 인상을 자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물가 인상으로 고통받는 조합원들은 안중에도 없는 태도다.

반면 민주노총은 이명박의 공공부문 사유화와 비정규 악법 시행 확대에 맞선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이 투쟁을 거대하고 강력하게 건설해 이명박을 돕는 한국노총 지도부를 고립시켜야 하고, ‘반동의 불도저’ 이명박을 저지해야 한다.

한국 사회 부패의 심장, 이진희를 처벌하라

장호중

김용철 변호사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은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이종찬과 국가정보원장 내정자 김성호, 금융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황영기가 삼성에서 뺨값을 받아 왔다고 추가 폭로했다.

이번 발표는 이학수, 김인주 등 삼성 고위직들과 이재용을 소환 조사하는 등 생색을 내고 있지만 “소득없는 압수수색 쇼”(사제단 김인국 신부)에 이어서 ‘소득없는 소환조사 쇼’를 하고 있는 특검에 대한 경고이기도 했다.

특검은 광범한 대중적 반감 때문에 이명박 특검처럼 황당하게 수사를 마무리하지 않았지만 ‘몸통’을 보호하면서 어디까지 수사를 해야 할지 눈치를 보고 있는 듯하다.

그나마 김용철 변호사와 사제단이 추가 폭로 계획을 밝히자 그제서야 삼성이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에 건네 준 수백 억 원 규모의 비자금 중 일부의 행방을 찾아내는 등 ‘성과’를 내기 시작했을 뿐이다.

그래서 김용철 변호사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은 “[특검이 삼성에게] 항구적인 범죄 권력 체제를 유지하도록 만들어 준다면 [수사를] 안 하느니만 못한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수사가 더 진전되지 않는다면 금감위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부정 주식거래 혐의를 입증하더라도 삼성 계열사들과 이진희 일가는 고작 20억 원의 벌금을 무는 선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사회 곳곳에 박혀 있는 이진희의 하수인들은 면죄부를 받게 될 것이다.

특검과 삼성 ‘프렌들리’ 이명박 정부, 그리고 금감위 뺨값 관료들의 확고한 지

원에 자신감을 회복하고 있는 삼성은 최근 <프레시안>에 10억 원의 손해배상금과 정정보도문 게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해 <프레시안>이 보도한 ‘삼성전자, 수출원임 과다 지급 의혹’ 기사 때문에 “17조 원의 브랜드 가치 하락”을 겪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정·부패를 보도한 <프레시안>이 아니라 그것을 저지른 이진희와 삼성 간부들 자신이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린 장본인이다. 게다가 무노조 노동 탄압, 탈세와 불법 로비 등 이진희의 삼성에는 지켜야 할 만한 ‘가치’가 없다.

자살 총동

한편 삼성중공업의 기름 유출 사고로 태안 주민들의 건강이 심각한 위협에 놓여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녹색연합과 보

건의료단체연합이 태안 주민 3백2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7퍼센트가 우울증과 강박장애 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 자살 충동을 느낀 사람도 20퍼센트나 됐다.

또, 방제작업에 참여한 주민들의 87.3퍼센트가 ‘기름 덩어리나 기름이 묻은 물건을 맨손으로 만졌다’고 답했고 이들 중 대부분이 기침, 메스꺼움, 어지러움 등의 증상을 느꼈다.

그러나 얼마 전 삼성중공업에 면죄부를 주는 특별법을 통과시켜 이진희에게 ‘은혜’를 갚고 있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주민들의 절규에는 눈과 귀를 닫은 지 오래다.

따라서 특검과 국회에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반삼성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태안 주민들은 태안 앞바다가 기름으로 뒤덮인 지 1백 일이 되는 오는 15일 삼성 이진희와 하수인들을 규탄하는 시위에 참가할 예정이다. 이 시위에는 그동안 삼성의 악행에 맞서 싸운 시민사회 단체들과 노동자들도 참가할 예정이다. 이런 투쟁이 더 크게 벌어져야 한다.

급진 음악과 함께 반전 운동을



김광일

9·11 직후 미국의 일부 라디오 방송국들은 1백50여 곡의 방송을 규제했다. 9·11 공격이 부른 혼란과 황폐함을 부추기고, 대중의 공격적 성향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반전 메시지를 담은 노래들도 금지됐다. 존 레논의 '이미진'은 물론이고, 사이먼과 가펍클의 '협한 세상에 다리가 되어(Bridge Over Troubled Water)'도 금지곡 명단에 올랐다. 전쟁에 대한 반감을 표현한 음악들이 대중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 반전 음악과 함께 3·16 반전 행동을 건설해 보면 어떨까.

존 레논과 U2 존 레논의 '이미진'은 국가, 소유, 종교를 부정하고 반전을 넘어 사회주의적 이상향을 담고 있다.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존 바에즈의 버전과 에바 케시디의 버전도 괜찮다. 특히 에바 케시디는 허스키한 소울 창법으로 '이미진'에 매우 독특한 매력을 선사하고 있다.

존 레논은 1970년대 초반에 정치적 메시지가 꽤 분명한 노래들을 내놓았다. 1960년 말에 시작된 세계적 반란과 베트남 전쟁이 그가 급진화한 배경이다. 1972년 영국 제국주의의 북아일랜드 테리 학살을 다룬 '피의 일요일(Sunday Bloody Sunday)'은 아일랜드 밴드 U2에 영향을 줬고, U2가 만든 동명의 곡은 대중적 인기를 얻었다. 1971년 뉴욕의 아티카 교도소에서 벌어진 반란과 학살을 다룬 존 레논의 '아티카 주립 교도소(Attica State)'도 훌륭한 노래다.

핑크 플로이드 핑크 플로이드의 대표적 명반인 <벽(The Wall)>에 실린 '벽 안의 또 다른 벽돌(Another Brick in the Wall)'은 자본주의 교육의 억압적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다. '달의 어두운 면(The Dark Side of Moon)'은 자본주의 체제의 소외를 섬세하게 다룬다.

1983년에 발매된 음반인 <더 파이널 컷(The Final Cut)>은 반전 색채가 강하다. 이 음반의 모티브는 밴드의 리더인 로저 워터스의 아버지의 죽음이다. 그의 아버지는 제2차세계대전에 참전했다가 전사했다. '조종사의 꿈(The Gunner's Dream)'은 이 음반의 백미다. 피격된 전투기 조종사가 추락할 때까지 과거를 추상하는 독백을 피아노와 현악기의 연주를 배경으로 담담하게 담았다. 이 음반의 '전후의 꿈(The Postwar Dream)'도 명곡이다.

밥 말리와 마빈 게이 아프리카에서 '수출'된 흑인 노예의 후손들이 만든 레게는 억압과 저항을 자주 다룬다. 밥 말리의 명곡들도 추천할 만하다. 밥 말리의

대표적인 저항 노래로 '전쟁(War)'과 '혁명(Revolution)'을 꼽을 수 있다. 이 곡들은 진하고 묵직하며, 호소력

질은 자메이카 레게의 진면목을 느끼게 한다. 밥 말리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혁명이 필요하다"고 노래한다.

흑인 소울 가수 마빈 게이의 '와츠 고잉 온(What's going on)'은 대표적인 반전 노래다. 이 곡은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는 노래인데, 분위기는 시종일관 끈적끈적한 흑인 소울의 특징을 보여 준다. 마빈 게이는 전쟁은 대안이 아니라고 노래한다.

한국 가요들 한국 노래 중에서도 좋은 곡들이 있다. 먼저, 윈디 시티의 노래들을 꼽을 수 있다. 진한 레게 색채에 소울까지 가미된 밴드의 훌륭한 재능과 연주 실력만큼이나 노래의 가사들도 뛰어나다. 1집에 실린 'No No No'와 2집의 '우리시대'에서는 부시의 전쟁을 통렬하게 비판한다.

강산에의 '더 이상 더는'도 훌륭한 반전 음악이다. 이 노래는 아프가니스탄 전쟁 당시 제작돼 큰 인기를 끌었던 반전 영상물의 배경음악으로 쓰여 많이 알려졌다.

음악이나 예술이 비정치적이고, 또 그 래야 한다는 주장은 헛된 것이다. 음악도 사회의 분위기와 정서를 반영하고, 때로 변화를 이끄는 데 일조한다.

전쟁에 대한 반감을 훌륭하게 표현한 음악들도 그랬다. 이 음악들은 부시의 냉혹하고 야만적인 전쟁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감수성을 자극하며 영감과 자신감을 줄 것이다.



이스라엘의 야만적 침략 전쟁을 고발한다

《아이들이 평화를 믿어라 - 엄마의 전쟁 일기 33일》, 림 하다드

2006년 레바논 전쟁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략은 이란 침략을 앞둔 사전포석의 성격이 강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와 레바논 민중의 저항으로 패배하자 부시 정부는 이란 침략 계획을 뒤로 미룰 수밖에 없었다. 저자인 림 하다드는 레바논의 대표적 영자 신문 <데일리 스타> 기자다. 그는 암살당한 친서방 지도자인 하리리의 지지자이며, 헤즈볼라와 갈등을 빚고 있는 현 총리 시니오라를 지지한다. 그런데도 그는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략 당시 헤즈볼라를 지지했다. 왜 그랬는지는 이 책이 아주 생생하게 묘사한 이스라엘의 살육 행위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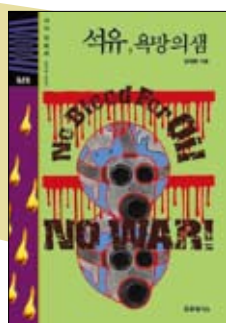


현대판 마녀사냥, 이슬람혐오주의를 논박한다

《이슬람 문화》, 이희수

《베일 속의 이슬람과 여성》, 오은경

이슬람은 테러를 선동하고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종교인가? 이슬람은 다른 종교보다 특별히 더 여성차별적인가? 침략 전쟁으로 다스려야 할 만큼? 이희수 씨는 이슬람의 역사, 무슬림[이슬람을 믿는 사람]의 삶뿐 아니라 현대적 쟁점들, '테러와의 전쟁', 팔레스타인 문제 등을 짚고 쉽게 설명했다. 책을 다 읽고 나면 이슬람혐오주의가 "현대판 마녀사냥"이라는 저자의 주장에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오은경 씨는 흔히 오해의 대상이 되는 이슬람과 여성의 권리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서방의 편견 없이 고찰하려고 시도한다.



부시는 왜 석유에 집착하는가

《석유, 욕망의 샘》, 김재명

얼마 전 미국 전 중앙은행장인 앨런 그린스펀이 자서전에서 "부시가 이라크를 침략한 것은 석유 때문"이라고 주장해서 논란이 일었다. 사실 그린스펀은 이미 상식이 된 생각을 말했을 뿐이다. 이 책은 중동 석유뿐 아니라 전 세계 주요 석유 산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국주의 열강들 간의 추잡한 석유 쟁탈전을 폭로한다. 김재명 씨는 한국에 드문 '분쟁 지역 취재 기자'인데, 이 책에는 중동과 유럽의 전쟁을 두루 섭렵한 지은이의 경험이 담겨 있다.

쉽고 재밌게 읽을 수 있는 반전 책들



이라크 전쟁의 A부터 Z까지

《새로운 제국주의와 저항》, 존 리즈

《미국의 세계 제패 전략》, 알렉스 캘리니코스

부시가 이라크를 침략한 배경과 결과를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꼭 읽어야 할 책이다. 저자들은 제국주의 체제의 야만성에 맞서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도 풍부하게 고민하도록 이끈다.

김용욱

왜 전쟁이 계속되나구?

이 책을 읽어봐

코소보 독립을 이용하는 제국주의 열강들

블라디미르 운코프스키 코리카
세르비아 사회주의자

발칸의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시련을 겪고 있다. 오랫동안 발칸 지역은 미국과 유럽연합이 한편이 되고 러시아가 다른 한편이 돼 제국주의적 패권을 놓고 서로 다투는 장소였다. 이제 코소보의 일방적 독립 선언으로 이런 제국주의 간 갈등이 더욱 악화될 것이다.

1991년 바르사바조약기구[냉전 시기 나토에 맞서 옛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이 체결한 군사 동맹]가 해체된 후 미국은 러시아의 부활을 막기 위한 대(對)러시아 포위 전략을 시작했다. 여기에는 중앙아시아에서 안정된 석유·천연가스 공급 통로를 확보하려는 의도도 있었다. 이를 위해서 미국은 내전이 벌어지는 발칸 지역에서 자신만이 안정을 보장할 수 있음을 보여 줘야 했다.

그래서 미국은 1995년에 보스니아에 군사적으로 개입했고, 1999년에는 코소보 문제를 해결한다며 세르비아를 폭격했다. 이제 미국은 1999년 말에 통과된 유엔 결의안을 간단히 무시하고 코소보의 독립 선언을 승인했다.

그러나 최근에 러시아가 발칸 문제에 개입하고 나섰다. 러시아는 종교와 역사적인 이유뿐 아니라 다른 무엇보다도 미국의 개입이 낳은 세르비아인들의 분노 때문에 이 지역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코소보 내 세르비아인들의 독립 반대 시위를 막고 있는 미군

러시아는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자신이 보유한 상당량의 에너지 자원을 사용해 왔다. 예컨대 러시아는 불가리아·그리스와 석유 수송관 건설 계약을 맺었고, 얼마 전에는 세르비아의 국영 석유 기업을 샀다.

이런 배경을 감안할 때 코소보 독립 선언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발칸 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연합 열강들 — 영국, 프랑스, 독일 등 — 이 코소보의 독립을 부추긴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코소보 독립 선언은 코소보 정부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1999년에 미국은 코소보주(州)의 행정을 유엔에게 넘겼다. 그러나 유엔 통치 하의 코소보 정부에 대한 코소보 알바니아인들의 불만이 갈수록 커졌다. 유엔 통치가 시작된 지 거의 9년이 지났지만 코소보의 일인당 국민소득은 유럽에서 가장 낮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자결(Vetevendosje)’이라는 급진 민족주의 운동이 탄생했다. 이 단체는 유엔 통치를 ‘신식민지적’이라고 비판해 엄청난 탄압을 받았다. 지난해 ‘자결’이 조직한 대중 시위에서 경찰이 발포해 시위대 2명이 죽었고 ‘자결’의 지도자들은 불법적으로 몇 달 동안 구금됐다. 미국은 ‘자결’을 ‘코소보의 적’으로 규정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유엔 식민 통치를 유럽연합 식민 통치로 대체했을 뿐, 코소보에 대한 통제의 끈을 놓지 않았다. 권력은 궁극적으로 유럽연합 민간임무단의 손에 있을 것이다. 민간임무단은 “코소보 당국이 내린 결정이나 채택한 법률들을 무효로 만들거나 코소보 관리를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유럽안정구상(ESI)의 의장 제랄드 나우스는 “코소보는 결코 독립 국가라고 할

» 8면으로 이어짐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한 생후 6개월의 무하마드 알보라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테러를 자행하다

“3·16 행동에서 우리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연대를 보여 주세요”

매튜 쿡슨
〈소셜리스트 워커〉기자

지난주부터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인들을 상대로 테러를 자행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이스라엘로 로켓을 발사하는 것을 막으려고 공격을 시작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진정한 목적은 이스라엘의 억압에 맞서는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을 분쇄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5일 동안 공습해 1백 명이 넘는 팔레스타인인들을 살해했고 그 중 대부분은 민간인이었다. 3백50명이 넘는 팔레스타인인들이 부상했다. 반면에 이스라엘인은 단지 3명이 죽었고, 그 중 두 명은 군인이었다.

이스라엘은 미 국무부 장관 콘돌리자 라이스의 방문을 앞두고 일단 ‘철군’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공격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스라엘 총리 에후드 올메르트스는 “우리는 군사작전 중이다. 지난주의 공격은 일회성 작전이 아니다” 하고 말했다.

팔레스타인 자발리아 난민촌에 있는 알아우다 병원의사인 모나 엘페라는 이렇게 말했다. “여성, 아동, 장애인 들을 포함해 많은 팔레스타인인들이 죽었습니다. 많은 NGO 단체들이 공격을 받았고, 그 중에는 의료 구호 단체들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이들에게 조금도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팔레스타인인들은 이스라엘의 공격 때문에 3일 동안 물을 공급받지 못했습니다. 가자 지구에 거주하는 1백50만 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은 2006년부터 이스라엘의 제재 조치로 고통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더 악화됐습니다. 전기가 거의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물을 작동하고 앰불런스를 운영할 연료조차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우리 병원으로 부상자 69명이 실려 왔습니다. 몇 개의 침대와 두 개의 수술실을 보유한 우리 병원으로서 는 그들 모두를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많은 부상자들이 바닥에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부상자 일부를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인력과 자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치료를 기다리다 과다출혈로 사망했습니다.

“가자 지구 보건부 장관은 물을 끓여 마시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수돗물을 정화할 염소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팔레스타인인들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가자지구 공격은 미국과 이스라엘 정부의 지속적인 하마스 정부 파괴 시도와 맞물려 있다. 《배니티 페어》 3월호는 2006년 1월 팔레스타인 총선에서 하마스가 승리하자 부시가 노발대발했다고 폭로했다.

부시는 마흐무드 압바스 팔레스타인 대통령과 파타 운동이 하마스 정부를 상대로 쿠데타를 일으키도록 부추기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지난해 6월 하마스는 파타와의 충돌 직후 가자 지구를 통제하기 시작했고, 부시의 계획은 좌절됐다.

미국 부통령 딕 체니의 보좌관이었던 데이비드 워저는 “사실 하마스는 쿠데타를 일으켰다기보다는 파타가 쿠데타를 일으키기 전에 기선을 제압한 것이다” 하고 지적했다.

군사작전

모나는 이렇게 말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로켓 공격에 반격한 것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가자 지구를 계속 점령해 온 사실을 감추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은 2004년에 가자 지구에서 철수했지만 팔레스타인인들의 삶을 계속 통제해 왔습니다. 팔레스타인 민중은 이스라엘의 점령에 맞서 싸울 권리가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NGO 네트워크 책임자인 암자드 샤와는 이렇게 말했다. “이스라엘 군대는 팔레스타인 아이들을 살해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로켓을 발사했습니까? 전혀 아니죠. 그 아이들은 단지 팔레스타인인이란 이유로 살해됐습니다.”

암자드와 모나는 영국과 다른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3월 15·16일 국제공동반전행동 같은 시위에 참가해서 가자 사람들에 대한 연대를 보여 줄 것을 당부했다.

“팔레스타인인들은 정의를 소중히 여기는 전 세계인들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매일 희망을 잃고 있는 일부 팔레스타인인들을 위해서라도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가자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팔레스타인인들은 고립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라에서 진행되는 반전 시위에 참가해서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연대를 보여 주십시오. 이스라엘에게 팔레스타인인들이 혼자가 아니며 당신이 이스라엘의 만행에 반대한다는 것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 여성의 날 1백주년

아직 오지 않은 해방을 향해

승주

지난 수십 년 동안 여성들의 삶은 크게 달라졌다. 우리 할머니 세대만 해도 여성들은 채 스무살이 되기 전에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사람과 결혼하는 일이 흔했고, 끝없이 밥을 짓고 바느질과 청소를 하며 대가족을 뒷바라지하곤 했다. 생활의 모든 면에서 엄격한 단속을 받았고 취업 장벽도 높았다.

1960년대 급속한 공업화 이후 여성 노동자들의 수가 급격히 늘어났다. 현재 여성 노동자는 전체 노동 인구의 41퍼센트를 차지하고 그 중에서도 기혼 여성이 다수가 됐다.

고등교육 기회가 비약적으로 확대되면서 여성들은 다양한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주요 국가고시 여성 합격자 수는 남성과 엇비슷해졌고 지난해 외무고시 여성 합격자는 67.7퍼센트로 남성 합격자를 추월했다. 언론들은 1등을 도맡는 여학생들 때문에 남자아이를 남녀공학에 보내지 않으려는 세태나 각종 수석을 휩쓸며 ‘여풍’을 일으키는 여성들의 사례를 요란스레 쏟아낸다. ‘알파걸’과 ‘골드미스’ 같은 신여성들이 남성들의 지위를 흔드는 시대라는 것이다.

확실히 여성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집 밖에서 임금 노동에 참여하는 여성들이 증가하면서 여성들의 사고와 생활 방식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최근 독신 여성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꼭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답은 40퍼센트를 넘었다. 1980년에 25~29세 여성 중 독신 비율은 14퍼센트에 그쳤지만 2005년에는 60퍼센트였다. 가임 여성 출산율은 1.13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고 이혼도 흔한 일이 돼 가고 있다.

이제 성 해방?

여성들도 성적 모험을 즐기라는 충고도 심심찮게 들을 수 있고, 심야 케이블방송 토코쇼에서는 여성들이 성생활을 놓고 거리낌없이 대화를 나눈다.

그럼 이제 여성들은 자유를 만끽하고 있는 건가? 정말로 여성 억압은 완화된 걸까?

성적 자유의 확대는 분명 여성들의 숨통을 트워 줬지만 여성을 눈요깃거리로 여기는 낡은 차별과 공존하고 있다.

여성의 인격은 종종 그의 지성과 재능 대신 “착한 가슴”이나 “진실한 몸매” 등으로 대체된다. <101 셀러브리티 핫 바다> 같은 프로그램들이, 스타들의 몸매를 부위별로 훑으며 ‘탄탄함과 균형감’을 논하는 게 쇠고기 등급 심사와 큰 차이가 있나 싶다.

이 틈에 기업들은 돈을 긁어모으고 있다. 한 해 24조 원이라는 매출산업 외에도 모바일 화보, 성인용 채널과 프로그램들은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고, 몸매 관리·미용 산업 규모도 26조 원에 이른다.

성의 개방화 한편에는 ‘단정치 못한 여자’를 손가락질하는 이중적인 성 도덕도 살아 있다. 성폭력 피해자들이 경찰에게 ‘여자가 왜 그 시간까지 집에 가지 않았나’, ‘웃은 뺨 입고 있었나’ 등 ‘당해도 싸다’는 식의 추궁을 받는 일은 지금도 비일비재하다.

여성 노동자들의 삶 —

이중의 굴레

‘여성 상위 시대’라는 언론의 호들갑이 사실이라면, 사장, 교장, 국회의원 같은 명망 있는 직업의 상당수도 여성이어야 한다. 그러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채 15퍼센트가 안되고, 공기업 고위 임원 중 여성은 단 2퍼센트(2007년)에 그쳤다.

‘유리천장’(위가 보이지만 올라갈 순 없는)은 지금도 단단하고, 숨막히는 차별이 다수 여성들의 삶을 지배한다.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불평등한 임금은 여성 노동의 여전한 특징이다. 여성 임금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비율이 67.6퍼센트에 이르고, 남성 임금의 64.2퍼센트만을 받는다(2006년). 남녀 임금 격차는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제일 높다고 해마다 지적받지만 50대 대기업의 임금격차는 지난 2000년에 비해 5년 동안 50퍼센트나 더 벌어졌다.

유통 서비스업에서 일하는 많은 여성 노동자들은 다리가 통통 부은 채로 쉬는 시간도 없이 하루 종일 계산대에 서서 바코드를 찍고, 무거운 박스를 나르느라 몸이 성한 데가 없다. 지난해 여름 홈에버 점거 농성장을 방문한 의료진은 여성 노동자들 심증팔구가 화장실도 못가고 일하느라 방광염에 걸려 있다고 진단했다.

사측의 감시 때문에 늘 신경이 곤두서 있는 서비스업 노동자들은 자다가도 “네, 고객님”하고 일어날 정도다. 미국 월마트에서는 노동자들의 얼굴에 몇십 초 동안 미소가 보이지 않으면 감시 카메라가 자동으로 경고를 보내고 해고까지 가능한 시스템을 가동했다고 한다.

노동자들이 아침에 출근카드를 찍는 순간부터 1분 1초까지 감시·통제하는 기술은 소름끼치도록 치밀해졌지만 여성들의 육아와 가사 부담을 덜어줄 서비스는 여전히 낙후해 있다.

보통 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 시설에 아이를 맡기려면 출산 전부터 예약을 하고 몇 년을 기다리는 ‘전쟁’을 치러야 한다. 정부의 보육 재정 부담률은 OECD 평균(70퍼센트)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24.5퍼센트다. 이는 개별 가정에 돌아가는 부담을 늘리고 여성 억압이 지속되는 데 커다란 구실을 한다. 자녀 한 명을 키우는 데 들어가는 총 양육비가 2억 3천2백만 원에 이르는 현실에서, 이것은 남녀 노동자 모두에게 불우한 일이다.

육아 때문에 자의반 타의반 직장을 떠났던 여성들은 저임금일자리엔정 다시 일터를 찾아야 한다는 압박을 받으며 이중 삼중의 굴레에 갇힌다. 성공한 커리어 우먼, 나이를 잊은 듯한 외모, 환상적인 섹스파트너, 현신적인 모성과 알뜰한 살림 솜씨까지 ‘수퍼우먼’의 덕목은 갈수록 까다로워진다.



지난해 여름을 뜨겁게 달군 이랜드 여성 노동자들

자매애? 날로 커지는 여성들 간의 양극화



이건희의 부인 홍라희와 삼성 하이비트 해고노동자들

참예한 사회 양극화 속에서 여성들 사이의 격차도 더 뚜렷해졌다. 삼성 하이비트 해고노동자 최세진 대표는 이견희의 부인 홍라희가 사들인 1백억 원짜리 그림 <행복한 눈물>은 집단 해고되거나 백혈병으로 죽어 간 삼성 노동자들의 “한 맺힌 피눈물”이라고 분노한다. 이명박의 부인 김윤옥이 한국타이어 부사장인 사위가 선물한 5천만 원 짜리 핸드백을 들고 다니는 동안 한국타이어는 노동자 16명이 잇따라 숨진 ‘죽음의 공장’으로 악명을 떨쳤다.

이처럼 최고 권력층에 오른 소수 여성들은 노동계급 여성들의 삶을 개선하려는 노력에 무심하거나 오히려 적대적이다.

최초의 여성 총리 한명숙은 면담하러 찾아온 KTX 승무원들을 외면했고, 승무원들은 경찰에 폭력적으로 연행됐다. 명품 브랜드 MCM으로 유명한 여성 CEO 김성주는 “실력이 갖춰지지 않은 여성을 사회가 배려해 주는 것은 오히려 역차별”이라고 말한다. 보육 문제도 정부에 기대지 말고 ‘스스로 해결사’가 되라고 한다. 여성 노동자는 사장이 여성이더라도 이해와 배려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1910년 미국의 사회주의자 엘리자베스 켈리 플린이 말했다, “노동자에게 여성 간의 자매애는 남성 간의 형제애나 마한가지로 공허한 속임수일 뿐이다.”

해방의 열쇠 —

남녀 노동자의 단결

억압은 변화된 성의 관계와 사회 관계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이명박이 “여성부를 두면 다른 사람들이 더 소외된다”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추진한 것은 얼마나 역겨운가. 이명박은 콘소리쳐 왔던 무상보육 공약도 최근 발표한 1백92개에 이르는 방대한 국정과제에서는 쏙 빼버렸다.

반면 이명박이 추진하려고 하는 신자유주의 정책들은 남녀 노동자들을 모두 고통에 빠뜨릴 것이다. 노무현을 두고도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 보호위주의 인기업합적 정책에 치중”했다고 팔뚝 뛰는 기업주들이 무엇 하나 순순히 내주지 않을 것이다. 여성 해방을 달성하려면 사람들의 삶보다 이윤이 우선인 자본주의를 무너뜨려야 한다. 전쟁 같은 쓸모없는 일에 낭비하는 자원을 빼앗아 육아와 가사 사회화, 노동시간 단축에 쓴다면 여성들보다 삶을 자유로이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1917년 혁명 이후 러시아에서는 공공 세탁소와 탁아소, 공공 식당, 혼자된 여성이 살 집을 제공했고, 낙태와 이혼을 합법화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변화들은 스탈린의 반혁명으로 후퇴했지만, 러시아 혁명이 펼쳐 보인 여성 해방의 가능성은 소중한 영감을 준다.

오늘날 착취와 억압을 무너뜨릴 여성들의 잠재력은 더욱 커졌다. 90년 전 러시아보다 더 많은 여성들이 남성들과 함께 일하며 이 사회의 부를 창조하고 있다. 이들이 정부와 사장들에 맞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싸운다면, 진정한 변화를 성취할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럴 때 성 차별 같은 보수적 관념도 붕괴하기 시작할 것이다. 지배자들은 노동자 투쟁이 벌어지면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고 말하지만, 노동자 계급의 관점에서 보면 이 때만큼 제대로 보이는 게 많은 시기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도 크고 작은 실마리들을 목격하고 있다.

뉴코아·이랜드 투쟁은 이랜드 사측에 적어도 5백억 원 이상의 매출 손실을 입히며 지배자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여성이 나약하고 수동적이라는 편견을 부숴 버렸고, 노동계급 여성과 남성이 단결해 싸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줬다.

이랜드일반노조 김경옥 위원장은 지난해 출소 직후 <맛봄>과의 인터뷰에서 “절거파업에 참가했던 조합원들은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조합원들이 ‘우리가 투쟁에 앞장설 테니 위원장은 따라오기만 하라’고 할 정도”라며 여성들의 놀라운 능동성을 증언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는 세계적 운동에서도 여성들의 참가와 기여가 눈부셨다. 부시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정당화하며 여성해방을 들먹였지만, 출산 중 사망률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을 만큼 아프가니스탄 여성의 처지는 해방과는 거리가 멀다.

여성 해방을 향한 노력은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 한 가운데 있어야 한다. 남성 노동자와 여성 노동자의 단결은 착취와 억압 모두를 끝낼 중요한 열쇠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칼럼

전진하고 있는 유럽 급진 좌파들

지난 1월에 이탈리아에서 로마노 프로디 중도좌파 정부가 붕괴한 것은 실제로 베를루스코니의 천박한 우익 정치가 종식되기를 바랐던 사람들의 희망을 무참히 꺾은 사건이었다.

2001년 제노바의 G8 반대 시위와 2002년 피렌체 유럽사회포럼의 성공 이후 다른 어느 유럽 국가보다도 먼저 이탈리아에서 좌파의 혁신이 성공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그런 희망은 이탈리아 재건공산당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도입하고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한 프로디의 중도좌파 정부에 합류하면서 산산조각이 났다.

그러나 유럽의 모든 급진 좌파 정당이 실패했다고 성급히 결론지어서는 안 된다. 유럽 대륙의 반대편인 독일과 그리스에서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에 링케[독일어로 ‘좌파’]가 창당된 후 독일의 정치 지형은 흔들리고 있다. 링케는 서독 사민당(SPD)에서 이탈한 사람들과 옛 동독의 지배 정당에서 개량주의 정당으로 변신한 민사당(PDS)이 결합해 탄생한 정당이다.

다! 그래서 신자유주의 정당인 자유민주당(FDP)의 당수 귀도 베스테펠레는 “지금 링케가 SPD와 녹색당을 [왼쪽으로] 잡아당기고, SPD가 CDU를 [왼쪽으로] 잡아당기고 있다” 하고 불평했다.

시나스피스모스

한편, 그리스에서는 지난 4개월 동안 두 번의 대규모 파업이 일어났다. 집권당인 우익 신민주당(ND)의 연금 개혁과 사유화 정책은 광범한 도전을 받고 있고, 설상가상으로 ND는 부패 스캔들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거대 주류 정당인 중도 좌파 정당 범그리스사회운동(PASOK)이 이로부터 반사이익을 얻지는 못하고 있다. 지난번 집권했을 때 영국 신노동당식 정책을 취했던 PASOK은 지금 위기에 빠져 있다.

2주 전 내가 아테네를 방문했을 때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31퍼센트가 ND를, 28.3퍼센트가 PASOK을, 16.2퍼센트가 시나스피스모스(좌파 연합), 7.1퍼센트가 그리스공산당(KKE)을, 3.8퍼센트가 극우정당인 라오스(LAOS)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그 중에서 시나스피스모스가 가장 역동적인 세력이다. 시나스피스모스는 원래 그리스 급진 좌파의 지배적 세력인 KKE에서 떨어져 나온 다양한 분파들이 결합해 만든 정당이다. 최근까지 시나스피스모스는 국회에 진출하기 위해 필요한 3퍼센트의 표를 얻기 위해 고군분투해 왔다. 그러나 이제 시나스피스모스는 KKE와 함께 1950년대 이래 여론조사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얻은 그리스 급진 좌파 정당이 됐다.

링케의 성장은 SPD 우경화에 맞선 노동계급 유권자들의 반란을 의미한다. SPD는 1998년~2005년에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 아래서 녹색당과 함께 정부를 운영하면서 실업수당을 줄이는 내용의 신자유주의 정책 ‘아젠다2010’을 강제로 추진했다.

SPD는 2005년 연방의회 선거에서 패배한 후에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우익 정당 기민련(CDU)과 함께 정부를 구성했다. 2005년 연방의회 선거에서 링케의 전신은 8.7퍼센트를 얻어 연방의회에서 54석을 확보했다.

새로운 SPD 당수 쿠르트 벡은 링케를 두려워한다. 그래서 SPD는 아젠다2010을 무시하고 장년 구직자의 실업수당 증액 정책을 밀어붙였고, 대연정 정부가 우편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정책을 도입하도록 화 계획을 좌절시킨 것이다.

메르켈도 선거 운동에서 리히텐슈타인을 ‘조세도피처’로 이용하는 것을 비판하는 척해야 했다.[최근 독일의 주요 기업가들이 세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 리히텐슈타인으로 자금을 이동시킨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는]

링케와 시나스피스모스는 프로디 정부의 사례로부터 교훈을 배워야 한다. 급진 좌파 정당이 전진할 수 있는 길은 의회 안에서의 협상과 연합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투쟁과 연대하는 데 있다.

■ 이명박의 ‘서민지옥’ 정책

국민연금 개악

장호중

이명박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방안이 발표됐다.

그 핵심은 새로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사람들에게 그만큼 국민연금을 삭감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에 노무현이 국민연금을 3분의 1이나 삭감하면서 8만 5천 원짜리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했는데, 이제는 기초노령연금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 저소득층일수록 보험료 대비 연금 수급액이 높은 현재의 국민연금 지급 방식을 바꿔 소득재분배 기능을 없애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저소득층의 국민연금은 지금보다 훨씬 적어진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늘리겠다고 하지만 이처럼 국민연금을 형편없게 만들면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 커질 것이다.

국민연금에 가입해 받을 수 있는 돈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액수와 비슷해지고, 둘 모두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국민연금에 남아 있으려 할까?

이명박 정부는 국민연금을 확실하게 인기없는 제도로 만들려 한다. 그래야 각종 사보험과 사적 연금이 성장할 수 있을 테니 말이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는 정부 재정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상황에서 기업과 부자의 세금을 대대적으로 깎아주려 한다. 이렇게 되면 평범한 노동자·서민의 부담만 늘어나게 된다.

이명박의 국민연금 개악을 막아내야 한다.

» 5면에서 이어짐

수 없다” 하고 지적했다.

세르비아는 러시아뿐 아니라 스페인, 그리스, 사이프러스,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등의 외교적 지지에 기대서 코소보의 유엔 가입을 막으려 한다. 세르비아의 진정한 목표는 세르비아인이 다수를 점하는 코소보 북부 3개 주를 세르비아로 편입시켜 코보소를 사이프러스처럼 분할하려는 것이다.

미국이 코소보를 지지하고 러시아가 세르비아를 지지하는 것은, 열강의 뒷받침을 이용해 상대방을 제압하려는 세르비아인들과 알바니아인들의 민족주의적 태도를 더 강화할 뿐이다.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세르비아 사회주의자들은 세르비아 민족주의에 도전해야 하며, 세르비아 노동자들이 세르비아 정부의 코보소 압박으로부터 아무런 이득도 얻을 수 없다고 지적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지배 계급뿐 아니라 러시아 지배 계급에게도 명확히 반대하면서, 동시에 코소보 알바니아인들과 연대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코소보의 독립이 실질적인가 아닌가를 떠나서 독립된 코소보가 세르비아와 알바니아 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민족적으로 ‘순수한’ 국가를 건설하려는 시도는 불가피하게 전쟁과 민족 청소를 낳을 수밖에 없다. 발칸 지역처럼 민족 구성이 복잡한 지역에서 민족주의적 해결책이란 있을 수 없다.

대신에 우리는 발칸에서 기층의 사회·반제국주의 운동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건설해서 모든 종류의 억압과 차별에 도전해야 하며, 진정한 민족자결권을 보장할 발칸 사회주의연방의 건설을 주장해야 한다.

늙은 후퇴를 보여 주는 진보신당

전지윤

진보신당(가칭)이 창당과 총선 준비에 나서고 있다. ‘평등, 생태, 평화, 연대’를 핵심 가치로 제시하고 있는 진보신당은 또 하나의 진보정당으로서 진보의 몫을 확대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그러나 진보신당의 건설 과정은 그렇지 않았다.

우선 진보신당은 민주노동당에 ‘종북주의’라는 멍에를 뒤집어씌웠다. 자신들의 정파적 이익을 위해 <조선일보>가 “이제 민노당은 친북·종북 노선의 … 집합소가 돼 버렸다”고 말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다. 민주노동당에 남아 있는, 심지어 자주파가 아닌 사람들까지 모두 졸지에 ‘종북주의자’가 돼 버렸다.

심상정 비대위 일원이었던 오건호 씨도 “종북주의론은 궁지에 몰린 자주계열을 낭떠러지로 몰아넣고, 새로운 신당을 만들려는 사람들에게겐 분리 이유를 제공하는 카드였다”고 지적한다. 오건호 씨는 진보신당이 다가오는 총선에서도 “‘구태의연하고 친북적이며 운동권이 몰려 있는’ 민주노동당이라[며 공격할] … 개연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것은 정말 재앙적 잘못이 될 것이다.

민주노동당을 탈당한 단병호 의원은 “신당이 민노당보다 더 우측으로 가는 정당이면 나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런데 진보신당은 명백히 민주노동당보다 더 우측을 향하고 있다. 예컨대 심상정 의원은 “민주노동당이 그동안에 낸 정책 중에 아주 소중한 것이 사회연대전략”이라고 했다.<손석희의 시선집중>

‘사회연대전략’은 정규직이 자기 몫을 양보해 비정규직을 도와주자는 것이다. 이것은 정규직·비정규직의 단결 투쟁 전략에서 후퇴한 것이고, 투쟁 자체를 수반하며 결국 기업주에 대한 ‘양보’를 낳을 뿐이다.

이 같은 우경적 후퇴는 2월 24일 ‘진보신당 건설 대토론회’에서 정태인 씨가 발표한 ‘진보신당의 국가비전’에서도 드러난다. 여기서 정태인 씨는 “기업은 노동자의 일자리를 보장하고 노동자는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는 “생산성 타협”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것은 기성정당들과 큰 차별성 없는 계급 타협 방안이다.

상층 명망가 위주

계급 타협을 위해 필요한 것은 대중 투쟁보다 의회 내 협상이기 때문에 ‘운동권당’을 비판했던 것이다. 심상정 의원도 [대중 투쟁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스피커로서의 당”보다 “제도정당으로서 국민의 평가와 책임의 원리에 순응”할 것을 강조한다.<프레시안> 인터뷰

심상정 의원은 지난 4년간 의회 내 협상 위주의 ‘개혁공조’ 등을 추진해 온 장본인이기도 하다. 그 점에서 민주노

3월 2일 진보신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대회

동당이 “‘개혁공조’ 식 활동”으로 “노무현과 차별화하는 데 실패”했다는 진보신당 쪽의 비판은 이율배반적이다.

진보신당 쪽 인사들이 민주노동당을 비판하며 내건 명분들도 빛이 바래고 있다. 예컨대 조승수 씨는 이주노동자 연대, 국제주의 등을 강조했는데, 진보신당은 ‘여수화재참사 1주년 집회’ 날 창당 대토론회를 했고 3·16 국제공동반전행동 때 창당 대회를 한다.

상층 명망가 위주로 아래로부터 충분한 의견 수렴없이 진행되는 창당 과정도 여러 가지 잡음을 낳고 있다. 민주노동의 민주노동당 배타적 지지를 철저히 키려는 진보신당의 계획도 어그러지고 있다. 명분없는 분열에 현장 노동자들이 반발하기 때문이다. 심상정·노회찬 의원이 민주노동당 의원직을 유지해 세비 등을 다 챙기면서 신당을 만드는 모습도 보기 좋지 않다. 여러 가지 면에서 진보신당은 진보정당 운동의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진보신당과 동반 우경화하지 말라

비례후보 전략명부 철회하라

민주노동당을 더 우측으로 이끌려던 인사들이 탈당해 진보신당을 만드는 상황에서 민주노동당은 이명박에 맞선 투쟁과 급진적 대안 제시에 나설 필요가 있다. 그런데 거꾸로 민주노동당도 더 우측으로 이동하는 역설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비대위가 당원들에게 전권을 위임받아 일방적으로 선정한 비례대표 전략 공천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심각하다. 지난 대선 때 정동영을 지지한 광정숙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전 상임대표, 2006년 지방선거 때 강금실을 지지한 이정희 변호사 등을 공천한 것이다.

물론 자유주의적 자본가당을 지지했던 사람이 급진화해 진보적 노동자당을 지지한다면 좋은 일이다. 그러나 별

다른 해명도 없이 그런 사람을 노동자당의 후보로 내세울 수는 없는 일이다. 이처럼 노무현 아류와 차별성을 없애는 공천에 대해 정성희 집행위원장은 “외연 확대”라고 정당화했다. 그러나 ‘외연 확대’도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어야 한다.

천영세 비대위가 노동자·민중 운동을 대표하는 인사들을 비례후보로 전략 공천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도 의문스럽다. 예컨대 비대위는 김경욱 이랜드노조 위원장 본인에게 상의도 없이 비례후보 명단에 올렸다가 항의를 받았다.

차별성

결국 특정 정파 후보에게 자리를 주기 위해 비정규직 투쟁의 상징적 인물을 비례후보로 공천하지 못한 것은 통탄스럽다. 반면 비정규직 비례후보인 전 민주연합노조 홍희덕 위원장은 노

사화합선언을 했던 사실이 불거지고 있다.

자주파의 패권주의에 대한 수많은 비판이 있었음에도 자주파 인사들 다수가 버젓이 비례후보로 출마한 것도 당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다.

이런 결과는 천영세 비대위가 “심상정 비대위의 혁신 방향과 취지, 재창당의 기본 방향은 받아 안고 간다”고 공언할 때부터 예고된 일이다. 그래서 우리 다함께는 지난 중앙위원회에서 천영세 비대위의 혁신 방향을 비판하고 전략공천권 부여를 반대한 바 있다.

민주노동당 비대위의 우경화 행보는 ‘어차피 같이 우경화할 거면 왜 굳이 분당해야 했는지’ 하는 냉소와 비판을 낳고 있다.

민주노동당 천영세 비대위는 즉각 문제투성이인 비례후보 전략명부를 철회하고 진정한 노동자·민중 운동을 대표할 만한 전략명부를 제시해야 한다.



이명박 시대, 돈 없으면 아프지도 말라?

이명박 시대의 서막은 고소영 청와대와 강부자 내각이라는,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희비극이었다. 시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정부의 서막이 이렇진대 저들이 만들 세상은 도대체 어떨까?

인수위는 서민들이 그나마 기댈 수 있었던 공공부문의 필수서비스들을 재벌과 다국적 기업에게 모두 팔아 넘기겠다고 밝힘으로써 이명박 시대의 미래를 제시했다.

매각 리스트의 첫 줄에 올라있는 것은 가스공사, 한전, 항만공사, 공항공사(시장형 공기업), 그리고 철도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등(준시장형 공기업)이다. 물, 전기, 가스, 철도, 지하철을 이제 기업 이윤추구의 시장판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뿐인가? 우체국도 매각 대상이고 KBS2와 MBC도 예외가 아니다. 채널 7번은 (주)조선-CNN 방송이, 11번은 (주)중앙-MSNBC 방송이 나온다는 얘기가.

기업에 내다팔려는 것이 공기업만은 아니다. 교육과 의료도 그렇다. 대학자율화와 입시자율화라고? 자율화되는 것은 등록금이고, 이미 빈사 상태에 있는 공공육의 관뚜껑에 대못을 박자는 얘기가.

이명박 정부는 아예 건강보험까지 들어 먹겠다고 나서고 있다. 그 첫 시도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다. 당연지정제는 모든 병원이 건강보험증을 가진 환자를 ‘당연히’ 받아줘야 한다는 제도다.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부유층 환자만 받아 비싼 의료비를 챙기려는 병원들이 건강보험환자를 거부할 수 있다. 아무 병원이나 멋모르고 들어갔다가 ‘우리 병원은 건강보험증을 안 받는데요’라는 면박을 들을 수 있다.

건강보험증이 안 통하는 병원의 진료비는 얼마나 될까? 연세대 외국인클리닉을 보면, 건강보험증이 없는 외국인들은 건강보험진료비의 4배를 낸다. 건강보험증이 통하는 병원과 약국에서는 병원 진료비의 30퍼센트와 약값의 30퍼센트를 본인부담금으로 내면 된다. 감기의 경우 대략 5천 원 안팎이다. 건강보험증이 안 통하는 병원은 여기에 13을 곱해야 한다 (본인부담금×3.3×4). 감기 진료 한 번에 최소 7만 원 이상이 든다는 얘기가.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갈 병원이 없어지거나 진료비가 비싸지는 것이다. 건강보험 환자를 안 받는 병원은 자기 마음대로 병원비를 책정하게 된다. 자기 동네에

그런 고급 병원만 있다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비싼 진료비를 내야한다.

지금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모든 의료비는 정부가 결정하는 가격으로 통일돼 있다. 그런데 병원자본이 마음대로 독점가격을 정할 수 있게 되면 의료비 폭등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진료비가 올라가면 건강보험진료비도 덩달아 올라가게 된다.

의료비 폭등

더 큰 문제는,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민영 보험회사들이 공적 건강보험의 사회적 기반을 흔들게 돼 건강보험 자체가 위태롭게 된다는 것이다. 당연지정제 폐지는 민영 보험회사들에게 큰 이익이다. 고급 병원이 생기면 ‘고소영’과 ‘강부자’들은 귀족대우를 받는 이런 병원으로 몰릴 테고, 삼성생명이나 AIG 같은 민영 의료보험사들은 고급 병원에 다니는 부유층 고객이라는 안정적인 새로운 시장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게 당연지정제 폐지는 시작일 뿐이다. 이명박의 보건의료 공약은 민영 보험 활성화다. 그는 “민영 보험을 미국 수준으로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하려면 라틴아메리카나 미국처럼 국가가 운영하는 건강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당신도 이런 고통에 직면할 수 있다

보험이나 의료보장체계를 아예 없애버리거나 대폭 축소해야만 한다. 즉, ‘건강보험 의무 가입제’의 폐지다.

지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래서 최고 부유층들은 소득 비례에 따른 높은 보험료를 감수하고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밖에 없었다. 또, 기업과 정부가 보험료의 50퍼센트를 부담하는 덕분에 대다수 국민들은 자신이 내는 건강보험료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건강보험 의무 가입제가 폐지되면 어떻게 될까? 고급 병원에 다니기 위해 값비싼 민영 보험에 가입한 최고 부유층은 그 즉시 공적 건강보험에서 탈퇴할 것이다. 최상층 5퍼센트가 탈퇴하면 소득 비례 보험료 제도 때문에 보험료 부담을 대신 떠안게 될 그 다음 계층이 건강보험에서 도미노 식으로 탈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인구의 약 12퍼센트가 건강보험에서 탈퇴하면 건강보험 재정은 현재의 반으로 줄게 된다. 지금 재정으로도 치료비의 약 60퍼센트만을 부담하고 있는데, 건강보험 재정이 반쪽이 돼 치료비의 30퍼센트만 부담할 수 있게 된다면 건강보험은 사실상 붕괴다. 이것은 가상 시나리오가 아니라 칠레 등의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지금도 건강보험의 보장률이 너무 낮

아 대다수 사람들은 하나 이상의 민영 의료보험에 울며 겨자 먹기로 가입해 있다. 한국의 민영 의료보험료 규모는 유럽의 4배로, GDP의 1.2퍼센트(10조 원) 규모다. 이미 민영 보험은 공통이다. 그런데 민영 보험을 더 활성화시킨다고? 그 길은 건강보험을 무너뜨리는 것밖에 없다.

한국판 〈식코〉

건강보험이 붕괴되면 민영 보험은 폐돈을 벌고, 결국 민영 보험회사가 통째로 병원을 사서 의료제도를 좌지우지하게 된다. 마이클 무어의 영화 〈식코〉를 떠올려 보라. 민영 보험에게는 천국이겠지만 국민들에게는 재앙이다. 민영 보험회사에 내야 할 보험료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병원비는 본인이 전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수준에서 단순 비교해도 국민건강보험은 1백 원을 내면 2백18원을 돌려받는 반면 민영 보험은 1백 원을 내면 60원 정도를 돌려받을 뿐이다.

공립병원 비율이 73퍼센트, 공적 의료보장률이 75퍼센트 수준인 대다수 OECD 국가들에 비해 우리 나라는 공립병원 비율이 8퍼센트, 의료보장률이 50퍼센트로 의료체계가 이미 매우 시장화돼 있다. 그나마 의료의 공공성을 세 제도 — 병원이 주식회사병원을 못 만들게 금지하는 비영리법인제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의무가입제 — 가 떠받들어 왔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이 세 제도를 모두 없애 건강보험마저 무너뜨리자는 것이다. 삼성병원과 현대병원 그리고 삼성생명과 AIG에게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주고, 대다수 서민에게는 감기 걸릴 여유조차 뺏자는 것이다.

만일 당신이 사랑하는 가족, 친지, 친구, 연인 중 누구도 사고를 당하거나 아프지 않을 확신이 있다면 이명박의 길을 선택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그럴 자신이 없다면 방법은 딱 한 가지다. 이명박의 의료 시장화에 맞서 싸워야 한다.

보건의료를 시장판으로 만들려는, 모든 공공영역을 기업의 무한 이윤 추구의 장으로 만들려는 이명박 정부에 맞서 싸워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가 물·전기·가스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이고, 우리가 슈퍼맨이 아니라서 병들고 늙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개강 맞이 경제학 강연회

마르크스 경제학은 오늘날에도 유효한가

2008년 3월 10일(월) **서울대 자연대 28동 301호**

주최: 대학생 다함께 참가비: 5천원 문의: 02-2271-2395 <http://stu.alltogether.or.kr>

마르크스의 눈으로 한국 경제 바로보기
김창근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교수) 2시 ~ 3시 30분

노동가치론 : 자본주의의 비밀을 밝히다
강남훈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3시 50분 ~ 5시 20분

공황론 : 경제위기를 이해하는 열쇠
정성진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5시 40분 ~ 7시 10분

‘다함께’의 기본 입장

노동계급의 자기해방

자본주의는 착취, 억압, 빈곤, 환경파괴, 전쟁 등을 낳는다. 이것은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자들이 사회의 부를 만드는데도 생산과 분배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노동자들이 부를 집단적으로 통제하고, 이윤이 아닌 인간의 필요에 따라 부의 생산과 분배를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사회를 위해 싸운다. 오직 노동자들 자신의 대중 투쟁으로써만 자본주의 착취·억압 체제를 없애고 그러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근본적 사회변혁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이뤄지는 점진적 개혁들은 착취와 억압을 끝장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폐지되어야 한다. 자본주의 국가기관들은 종립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피억압자들의 투쟁으로부터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된다. 노동계급에게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국제주의

노동자들은 국제적인 계급이고 근본적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은 국제적인 투쟁이다. 우리는 노동자들 사이의 민족적 분리를 극복하고 국제적인 노동계급 운동을 건설하기 위해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지지한다. 우리는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 노동자들에 맞서게 만드는 모든 것에 반대한다. 우리는 북한 난민과 이주노동자의 이주 규제에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열강들의 세계 지배와 그들의 전쟁에 반대하고, 제국주의 지배에 맞서는 피억압 민족의 민족해방 운동을 지지한다. 근본적 사회변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 나라에 고립해서는 안 되고 국제적으로 확산되어야만 한다. 옛 소련과 동유럽처럼 북한과 중국과 쿠비는 진정한 사회주의가 아니다. 이 나라들도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비민주적 사회이다. 우리는 그 곳 노동자들이 지배 관료에 맞서 벌이는 투쟁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민중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노동계급은 국제 변혁의 일환으로서 남북한 모두에서 근본적 사회변혁을 이루는 데까지 나아갈 필요가 있다.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자본주의 하에서는 여성 차별, 인종 차별, 동성애자 차별 등과 같은 특정한 형태의 억압을 당하는 사회집단들이 있다. 이러한 억압들은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노동자 연대를 약화시키는 데 이용된다. 모든 형태의 억압에 반대해 민주적 권리를 옹호하는 투쟁은 근본적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한편, 근본적 사회변혁 없이는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여성, 이주노동자, 동성애자, 그밖에 영세노점상과 철거민과 빈민 등 억압당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정치적·시민적 권리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기 위해 투쟁한다.

현장조합원 운동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적 권리를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노조 지도자들의 역할은 자본주의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장내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노조 지도자들이 싸울 땐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로부터 독립한 현장조합원 대중 행동을 건설한다.

변혁 정치조직

노동자들이 근본적 사회변혁을 이루려면, 가장 전투적인 노동자들이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 사회변혁 지지자들은 노동자들과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대중조직 속에서 활동함으로써만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할 수 있다. 우리는 개량주의 지도자와 개량주의 사상이 피억압 대중의 이익에 어긋남을 실천에서 입증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기본 입장에 동의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하는 투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등록금 문제 해결하라

2월 29일 등록금이 비싸기로 유명한 고려대 입학식장 앞에서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이하 등록금 네트워크) 주최로 등록금 인상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고려대 등록금은 전국최고 수준인데 의예과는 1천3백만 원에 달한다. 등록금이 “1천5백만 원은 돼야 한다”는 전 총장 어윤대의 꿈이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소를 팔아서 대학 간다는 의미로 우골탑이라는 말이 있지만 요즘엔 등록금이 사람 잡는다는 의미로 ‘인골탑’이라는 말까지 등장했다.

한해 1백억 원씩 적립금을 쌓아서 자산을 불리면서도 등록금을 인상하

는 대학과 선거 때만 ‘등록금 반값’ 공약을 내놓고 오히려 등록금 인상을 부추기는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등록금 인상, 이견희 철학 박사 학위 수여 등 고려대의 반교육적 행동에 항의하다 출교당한 학생의 규탄 발언도 있었다.

입학식에 참가한 학부모와 학생들은 등록금 인상 반대 주장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등록금은□□다”하는 선전물에는 “등록금은 비싸다”에서부터 “등록금은 살인자다”, “등록금은 폭탄이다”, “등록금은 테러다” 등 신입생과 학부모들이 쓴 다양한 표현들이 가득 찼다. 기자회견과 함께 진행한 서명에도 1백75명이 함께했다.

기아·현대 자본의 탄압에 공동으로 맞서자

나는 지난 〈맞붙〉75호에 기아차 화성 공장 투쟁을 소개하며 라인 점거를 한 동지들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는 기사를 보냈다. 이 글을 읽고 고려대 안형우 동지가 보내 준 독자편지(〈맞붙〉76호 온라인 기사)는 이 동지들을 비판하기에 앞서 사측의 공격에 방어해야 한다는 점을 잘 지적하고 있다. 고려대에서 출교 철회 투쟁중인 안형우 동지의 지적에 감사를 전하고 싶다. 그러나 이 동지들이 라인을 점거하는 시점에 우리는 대의원대회에서 집행부에게 잘못된 합의에 대한 재협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었다. 함께 투쟁하던 동지들과 상의도 없이 들어간 이 동지들의 성급한 행동이 현장 여론을 악화시켰고 이를 계기로 사측이 공격하려 해, 우리는 서둘러 대의원대회를 마쳐야 했다.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대중 투쟁을 함께 조직했다면 하는 아쉬움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사측과 경찰의 공격이 집중적으로 가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동지들을 방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측이 고소·고발하자 경찰과 검찰이 1주일 후 즉각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또한 사측은 해고를 위한 징계위 개최를 일방 통보했다.

반격

이에 맞서 두 동지가 속해 있는 반에서는 즉각 현장 대책위를 구성해 반격을 시작했다. 선전물 발행과 천막농성, 출근투쟁 등을 결의하고 단호한 저항을 벌이고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관망하던 19대 집행부도 사측의 일방적인 태도를 비판하며 징계위를 연기

등록금 문제가 전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 전국 5백3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등록금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등록금 문제 해결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금속노조도 대의원대회에서 ‘등록금 동결’을 사회적 요구로 채택했다.

‘등록금 네트워크’는 등록금이 비싼 서울의 다른 사립대 앞에서도 기자회견과 선전전을 이어갈 예정이다. 3월 28일에는 전국대학생 2차 공동행동과 함께 ‘등록금 네트워크’ 주최로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민대회(가칭)’도 계획하고 있다.

정선영

시켰다.

나아가 집행부는 적극적인 방어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만약 방관적 태도를 취한다면 사측의 탄압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고, 노동조합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또 기아·현대 자본에게 공격당한 기아차 비정규직 해고 조합원들과 소위 ‘부품 도난 사건’으로 해고당한 4명의 조합원들도 여전히 투쟁하고 있다. 현대차 울산공장에서도 인원 부족에 항의해 라인을 중단시킨 정규직 현장위원 2명을 해고시켰다.

이렇듯 지금 자행되고 있는 탄압은 기아·현대차 전체 노동자들을 겨냥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투쟁들을 연결시켜 공동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10여 년간 현장 투쟁을 통해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명박 시대에도 투쟁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아차 화성공장에서 보여 주자!

김우용

3월 투쟁에 나선 이랜드 노동자들

이랜드그룹은 연초부터 불거진 대장균 쥐포 유통, 홈에버와 뉴코아 불법 주류 판매와 탈세 의혹에 이어 밤샘 근무하던 파견 여성 노동자의 사망으로 궁지에 몰려 있다. 과로사가 분명함에도 이랜드 사측은 “우리는 일을 시킨 적 없다”며 발뺌하고 있다.

또, 이랜드 계열 대형 할인매장에서

매출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카드깡’(허위 카드매출) 업자와 거래했다는 사실도 폭로됐다.

까르푸 인수 당시 발행한 매출 담보 채권 상환 시기가 다가와 온갖 무리수를 두면서 노동자 사망의 비극까지 낳은 것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를 대량 해고한 이랜드 회장 박

성수를 올해의 ‘성평등 걸림돌’로 선정했다. 이랜드 노동자들은 3월 8일 여성의 날 집회에서 박성수를 규탄할 것이며 상암점 집회도 준비하고 있다.

3월 29일에는 ‘(가칭)비정규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희망 연대의 장’을 열어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연대를 호소할 예정이다. 총선에서 사회적 이슈로 부각시키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이랜드 노동자들은 이명박과 박성수에 맞서 3월 투쟁을 준비하며 승리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

최영준

지역 사회 포럼

서울 동부지역 사회포럼

이라크 점령 5년 —

‘테러와의 전쟁’ 7년과 오늘날의 세계

일시: 3월 13일(목) 오후 7시 30분

연사: 김어진(민주노동당 파병반대대책위 집행위원장)

장소: 여성능력개발원(구 동부여성플라자) 2층(건대입구역 6번 출구)

참가비: 2천 원

문의: 011-9081-2793jinbojh@naver.com

인천지역 사회포럼

‘테러와의 전쟁’ 7년과 오늘날의 세계

일시: 3월 13일(목) 오후 7시 30분

연사: 최영준(‘다함께’ 활동가)

장소: 한국토지공사인천본부 4층 교육실

문의: 010-7556-5508

대학 맑스주의 포럼

교대·중앙대

‘테러와의 전쟁’ 7년과 오늘날의 세계

일시: 3월 11일(화) 오후 6시 30분

장소: 서울교대(추후 공지)

문의: 010-3163-1673

건국대·한양대

‘테러와의 전쟁’ 7년과 오늘날의 세계

일시: 3월 12일(수) 오후 6시 30분

연사: 정병호(‘다함께’ 운영위원)

장소: 건국대 상하관 316호

문의: 010-6876-5349

북부통합

삼성은 어떻게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가?

일시: 3월 18일(화) 오후 6시 30분

연사: 고재열(전 〈시사저널〉파업 기자,

현 〈시사인〉 기자)

장소: 고려대 정경관 5층 강의실

문의: 011-9952-6288

서부통합

이명박 시대 ‘88만 원 세대’들이

저항해야 할 이유들

일시: 3월 19일(수) 오후 6시 30분

연사: 우석균(의사,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한미FTA·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활동가)

장소: 이화여대 포스코관 151호

문의: 010-2263-1106



동료들에게 3·16 참가를 제안합니다

나는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다. 몇 년 동안 병원에서 일하면서 3교대근무를 하는 간호사들에게 정치적 주장을 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간호사들의 노동조합 가입률이 절반 정도여서 더욱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최근 나는 병원의 노동조합 활동가들을 만나면서 조금씩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다. 친한 동료이지만 비조합원인 친구들 몇 명에게 노동조합 가입을 권유했고, 그들은 의외로 쉽게 나의 주장에 동의하며 조합원이 됐다. 자신감을 얻어 3·16 국제반전공동행동을 소개하자 흔쾌히 집회에 가겠다는 친구도 있었다. 대

선에서 민주노동당을 지지했던 병원의 아르바이트 학생도 집회에 함께 가자는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편견

며칠 뒤 함께 집회에 가기로 한 조합원에게서 연락이 왔다. 비조합원인 다른 간호사에게 집회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 친구도 반전 집회에 가기로 했다고 말이다. 그는 집회 참가를 위해 함께 만나 토론하는 과정에서 곧 조합원이 됐다.

나는 이 사실을 노동조합 활동가들에게 알렸다. 그러자 한 노동조합 간부는

‘전쟁은 나쁜 것’이라며 다른 일정이 없다면 참가하겠다고 했다. 함께 있던 사무장도 동참하겠다고 했다. 대개 노동조합 간부들의 활동이 노동조합 쟁점에 집중되면서 정치 쟁점에 소극적일 거라고 내심 걱정했는데 그들의 적극적인 반응은 나를 더욱 고무했다.

3·16 국제반전행동을 사람들에게 제안하면서 나의 몇 가지 편견들은 부서졌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 더 많은 노동자들을 반전 집회에서 만날 수 있도록, 미리부터 제한을 두지 말고 동료들에게 권유해 보자.

배항미

간통죄의 구실

류민희 동지가 지난 호에 쓴 ‘간통죄는 폐지되어야 한다’ 기사를 잘 읽었다. 간통죄가 성을 억압하고 인간관계를 뒤흔리게 한다는 주장에 완전히 공감한다. 그러나, 간통죄를 여성의 성을 규제하는 반여성적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간통죄의 성격을 오해하게 하는 모호한 규정이다.

류 동지 설명처럼 ‘가족 수호’가 단지 간통죄 유지를 위한 핑계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가족제도 보호는 간통죄의 핵심 구실이다. 계급 사회에서 성 억압은 가족제도를 통해, 또 그것을 수호하기 위해 이뤄진다. 따라서 간통죄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억압적이다. 성 억압은 여성이 차별받는 현실 때문에 여성에게 더 가혹한 것이지, 단지 여성만 피해자인 것은 아니다.

가족제도가 여성에게 끼치는 영향은 복합적이고 모순적이다. 여성이 대개 남성보다 경제적으로 더 열악한 조건에 놓여 있기 때문에, 가족제도는 때로 여성을 보호하는 구실을 한다(대다수 여성들은 이혼시 삶이 더 악화된다). 물론 가족제도의 보호에서 제외되는 여성들도 있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가족제도는 근본적으로 여성을 억압한다. 왜냐면 가족제도는 여성의 무보수 가사노동에 바탕을 둬으로써 가정과 사회에서 남녀 불평등을 낳고 또 그것을 정당화하는 구실을 하기 때문이다.

과거에 간통죄를 지지하고 보수적 성 규범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 남성보다 여성이 많았다. 다수의 여성들이 홀로 살아갈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 동안 산업화와 고등교육 기회의 확대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재정 자립을 이뤘고, 이에 따라 여성의 자의식에 변화가 일어나, 남성과 성에 대한 태도도 바뀌었다. 오늘날 여성은 과거보다 성에 대해 더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고, 젊은 여성들은 특히 그렇다.

이러한 변화 때문에 주류 여성운동 단체들은 1990년대까지만 해도 간통죄를 ‘여성 보호’라는 이유로 지지한 반면, 오늘날은 대체로 간통죄 폐지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여기에는 여성운동 단체들의 노력으로 이혼시 재산 분할이 이전보다 더 평등해진 변화도 작용했다.

오늘날 가족제도는 이혼과 혼외 성관계, 혼외 출산 증가 등으로 흔들리고 있다. 지배자들은 위기에 빠진 가족제도를 지키려고 간통죄를 존속시키고 있다.

정진희

이주노동자와 연대하고 손을 잡아야

성동구 성수동 일대는 서울에서 영세 제조업체가 가장 많이 밀집해 있는 곳이다. 그래서 이곳은 이주노동자들이 아주 많이 있는 곳이고 이주노동자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며 단속하는 일이 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보다 못한 성동·광진구의 시민사회 단체들이 지난해 9월에 ‘해도해도 너무 한다. 폭력단속·추방을 반대하는 입장’이라도 밝히고 관심을 갖자’는 취지에서 ‘성동·광진 이주노동자 인권지킴이’ 발대식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렇다 할 활동을 못하고 지지부진하던 차에 까지만 위원장을 비롯한 이주노조 표적단속과 탄압이 벌어지면서 활동을 재개하고 있다. 지난 2월 21일에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건대입구 사거리에서 여수화재 참사 1주기를 맞아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문제를 시민들과 함께 생각해 보자는 취지의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이주노동자들은 직장에서는 같이 일하는 동료이고, 집 앞 골목에서 마주치고 같은 슈퍼마켓을 이용하고 동네 시장 통에서도 만나는 우리의 이웃이다.

전라도에서 성수동에 이사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경상도에서 성수동에 이사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똑같은 우리의 이웃이다. 10년 넘게 같이 살고 있지만 그들이 폭력단속에 쫓기며 목숨까지 걸어야만 하는 이유를 알지 못하겠다.

폭력 단속반

우리 정부 당국은 행정적 편의를 앞세운 인권 유린에 대한 변명이 궁색해지니까, ‘국가안보에 위해·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내국인 근로자들의 노동조건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국가안보에 위험 요인을 걱정한다면 남

의 나라 침략 전쟁에 우리 군대를 보내는 일부터 물려야 하는 것 아닌가? ‘내국인 근로자’를 보호한다면 비정규직을 양산해서 노동권을 짓밟는 일부터 당장 그만두고 이주노동자들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이 지켜지도록 해야 하는 것이 먼저 아닌가?

우리가 연대하고 손을 잡아야 할 곳은 ‘내국인 근로자’ 노동조건 보호 운운하면서 비정규직이나 양산하는 정부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고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약속하고자 한다. 우리의 이웃에 가해지는 폭력과 탄압을 이제 보고, 관심을 갖고, 모이기 시작했다. 이주노동자들과 연대해서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권·인권이 지켜질 때까지 길게 함께 가겠다.

문종찬(성동·광진 이주노동자 인권지킴이 공동대표, 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초등학교·중학교 일제고사를 폐지하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조만간 초등 4~6학년, 중학교 2·3학년을 대상으로 5개 교과(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에 관한 ‘2008년 국가수준 교과학습 진단평가’를 일제히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대입자율화, 고교평준화 해체, 영어몰입교육에 이은 이명박 정부의 또 하나의 ‘경쟁몰입’ 교육 프로젝트인 것이다.

서울시교육청도 다음달 6일 전국 16개 시·도에서 중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일제히 진단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초등학교에서까지 일제고사가 전면 부활하기는 1995년 이후 13년 만의 일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진단평가는 기초학력 및 교과 학습 부진 학생을 파악해 수준별 이동수업 등 각 학교 실정에 맞게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들을 새 학기부터 성적순으로 줄 세우겠다는 것이다.

이제 학생들은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 친해지기도 전에 친구를 제치고 더 높은 성적을 내기 위해 달려야 한다. 전교조 발표처럼 일제고사는 “학생들의 무한 재능과 생명력

의 발달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것”이다.

사교육비 압력도 커질 것이다. 비싼 사교육을 얼마나 더 많이 받느냐에 따라 성적의 우열이 가려지기 때문이다.

이번 일제고사로 학습지 시장과 사교육업체는 신이 났다. ‘중1 진단평가 대비 문제집’은 불티나게 팔리고 있고, 응시비가 2만 원이나 하는 한 사교육업체의 모의고사에 6천여 명이 넘게 응시했다.

학생들은 일제고사에 항의하며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교육감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 일제고사 도입 시도를 중단하라!

허그루

주간 <맞불>을
정기구독
하십시오



- ☐ 6개월 / 2만 5천 원 (신문값 2만 원 + 우송료 5천 원)
☐ 1년 / 5만 원 (신문값 4만 원 + 우송료 1만 원)

www.counterfire.or.kr / reader@counterfire.or.kr / 전화 : 02-2271-2395
계좌 번호 : 국민은행 048402-04-014849(예금주 : 백은진)

다함께에

가입
하십시오



표시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다함께'에 가입하십시오.
전쟁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반대해 함께 투쟁합니다.

다함께는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도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48402-04-014849(예금주 : 백은진)

- 미국의 이라크 점령과 이란 공격에 반대하십니까? ☐
비정규직화와 한미FTA에 반대하십니까? ☐
이윤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
성, 성 지향, 인종에 따른 차별에 반대하십니까? ☐
토론하고 논쟁하고 투쟁을 조직하는 활동가들의 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다함께’ 후원의 밤



뉴코아·이랜드 투쟁
연행자 벌금 및
‘다함께’ 고소고발
대응 비용 마련

3월 22일(토) 오후 6시
동국대 상록원 3층 식당

문의: 02-2271-2395
atgmail@nate.com
www.alltogether.or.kr

김환영 파병반대국민행동 운영위원 인터뷰

이라크 민중의 피로 석유 얻자는 파병, 함께 반대합니다



반전 운동이 이명박 굴복시켜야

오는 3월 16일에는 이라크 전쟁 5주년을 맞아 국제 반전 행동이 열린다. 한국에서도 파병반대국민행동이 3·16 행동을 준비해 왔다. 김환영 파병반대국민행동 운영위원을 만나 한국 반전 운동과 이날 행동의 의미를 들어 봤다. 김환영 운영위원은 평화재향군인회 사무처장으로도 일하고 있다.

이번 3·16 국제공동반전행동은 지난해 런던 국제반전회의에서 결정이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결정의 배경과 의의는 무엇입니까?

2006년 런던회의에서도 국제적 반전 시위를 결의한 바 있는데, 지난해 제가 참가했던 런던회의에서 또 다시 국제 반전 행동이 결정됐습니다.

국제적인 차원에서 반전 행동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국내 진보진영은 반전을 중심 의제로 삼지 않는 경향이 있는 듯해, 이를 중심 의제로 끌어올리려 노력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런던회의의] 의제는 매우 다양했습니다. 약간 힘이 빠져 있는 반전평화 운동을 다시 점화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전에 생각지 못했던 미국의 이란 공격에 대한 관심도 높았습니다. 이런 의제를 국내에서도 받아안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파병반대국민행동을 대표해 런던 회의에 참가했던 저는 국제적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쟁이라는 문제가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고, 한 국가 차원에서 해결 가능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당시 '파병반대국민행동이 런던회의에

대표자를 보낼 필요가 있겠느냐'고 하신 분들도 있었지만, 그 분들을 설득해 어렵게 갈 수 있었습니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이 국제회의에 대표자를 파견한 첫 경우였는데, 개인적으로 한국 반전 운동 역사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시는 이라크를 해방시키겠다며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현재 이라크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얼마 전 부시는 이라크 상황이 안정되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요.

지난해 8월 미국 재향군인회가 주최한 회의에서 부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라크 문제 해결의 샘플이 한국에 있다'고요.

부시는 이라크를 한국의 역사적 경험과 비슷하게 만들고 싶은 모양입니다. 한국전쟁을 통해 한국인을 분열시키고 분단을 고착화하고, 주한미군을 주둔시켜 장기 지배했던 방식 말입니다. 부시는 전쟁을 통해 이라크인들을 분열시키고, 이런 분열을 이용해 영구 지배하려는 시나리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의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이라크가 부시 뜻대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미국의 전쟁을 지원한 세계 여러 정부들이 정권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은 후보자 시절부터 자이툰 파병 재연장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명박은 자이툰이 기름밭 위에 주둔하고 있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중심 인물들은 모두 파병 옹호자들입니다. '석유 안보'라고 말하기도 하고, 석유를 싸게 가져온다고도 하는데, [유가 폭등에서 보듯이] 실제로는 정반대 아닙니까.

아르빌에서 유전을 계약했다지만 정작 이라크 정부는 이를 용인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은 파병의 정당성을 국익이나

실용에서 찾으며 결코 파병을 철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반전 운동이 그를 굴복시켜 끌어내려야 할 것입니다.

이명박 정권은 상설파병부대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여러 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 형식이든 국회 동의 없이 파병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파병이 PKO 형태로 포장되는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PKO라고 하면 국민들이 비교적 호감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은 그동안 국민의 압도적 반전 여론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데 구심 역할을 해 왔습니다. 이럴 수 있던 힘은 무엇이고 앞으로 반전 운동을 어떻게 확대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우리 파병반대국민행동의 능력이라기보다 국민들의 반전 의식이 확고히 생겨난 것 때문이죠. 이라크 전쟁 전에도 한국 정부가 베트남, 동티모르,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에 파병했지만 그때는 대중적 반전 운동이 없었습니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 때 비로소 대중적 반전 운동이 생겨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반전 운동에 처음부터 참가하지는 않았지만, 출근길에 김선일 씨 피랍 소식을 듣고 하늘이 노래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파병을 강행해서 국군의 위용을 보이자며 한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군인의 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파병 반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일종의 국민적 합의, 각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라크 파병 반대에 대한 합의에서 출발했는데 5년 동안 반전 운동을 진행해 오면서 아프가니스탄, 레바논 등 모든 파병에 반대하는 것으로 발전한 측면이 있습니다.

국민들은 처음에는 [단순한] 분노에서 시작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라크 전쟁이 진행되면서 침공의 명분이었던 대량 살상 무기도 없고, 인권이나 민주주의를 위한다는 게 다 거짓말로 판명됐습니다. 이런 명분 중 단 1퍼센트라도 사실이었다면 국민 여론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한발짝 더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라크 전쟁뿐 아니라 미국이 벌인 다른 군사행동들, 아프가니스탄 침략·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억압·레바논 침공·이란과 북한 압박까지 의구심을 확대하게 됐습니다. 게다가 주한미군의 군사행동과 베트남 전쟁 등 역사 속 미국의 군사행동까지 말입니다.

이런 점을 볼 때 국민들의 반전 여론은 확고하다고 봅니다. 이런 기반이 있기 때문에 파병반대국민행동이 그것을 잘 담아내고 외연을 더 확장시키며 발전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면?

이라크에서 1백20만 명이 죽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대충 1백만 명이 죽었다고 하죠. 이라크 민중의 피, 살, 뼈들, 그들의 분노, 그런 것으로 우리 목구멍에 풀칠하고 석유 얻어 사업하자는 것에 반대합니다.

이라크인들의 아픔을 나누면서 우리의 대안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노동운동, 빈민운동, 환경운동 다 중요하지만, 우리 이웃이 1백만 명이 죽어 가는데 이를 외면한다면 그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이 문제에 우리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이 점에서 파병 반대는 하나의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파병은 우리 사회가 잘못했다는 것의 극명한 상징입니다. 의기투합해 싸웁시다.

인터뷰 · 정리 한규한

※ 지면 관계상 생략된 인터뷰 전문은 <맞불> 웹사이트를 보시오.